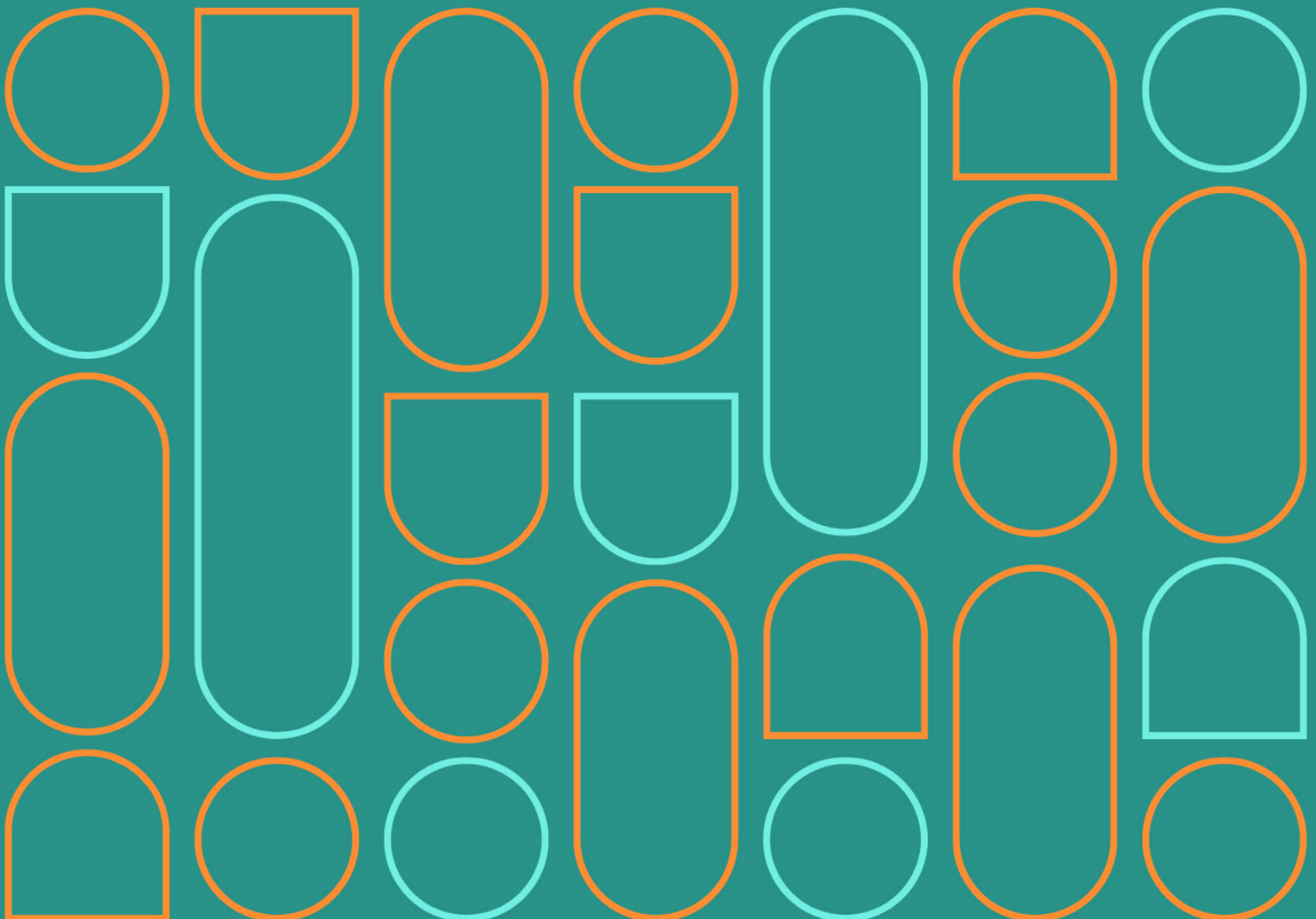


디지털 정의 실현!

WSIS+20 및 그 이상을 위한 행동 촉구

2025년 4월



[글로벌 디지털 정의 포럼](#)(GDJF)은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시민 사회 단체와 글로벌 노스의 협력 단체들이 힘을 모아 디지털 권력을 모든 시민에게 돌려주려 노력하는 역동적인 연합체입니다. 이 포럼은 구조적 정의 관점에 기반해, 다분적인 방법을 통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발전 지향적 국제 디지털 질서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 SIS)가 끝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포용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디지털 질서에 대한 비전을 이루는 것은,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현재 기업들의 욕심과 국가 통제에 의해 좌우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는 WSIS에서 합의 되었던 이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상 유지에 관한 문제에 대한 분석은 [GDJF의 요하네스버그 코뮌িকে](#)를 참고하세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무기화는 이미 광범위한 취업난, 잘못된 정보, 전쟁 범죄, 기후 재앙 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치권, 자유 의지, 인간성, 및 지구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디지털 정의가 필요합니다! 기술 패러다임은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 인권과 인류의 번영을 위한 자유
- 민주주의, 분배 정의, 사회 정의에 뿌리를 둔 평등한 사회
- 성평등
- 국제 연대
- 문화 다원주의
- 범인류의 이익을 위해 과학, 기술, 혁신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 책임
- 각 민족의 개발 자치권
- 자연의 권리와 기후 정의에 대한 존중
- 디지털 비동맹주의¹

우리의 요구:

글로벌 디지털 정의는 글로벌 디지털 협력의 초석 원칙입니다. WSIS 구현 메커니즘과 데이터 및 AI 통치에 관한 새로운 제도적 움직임은 디지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디지털 발전의 가능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다음을 향해 꾸준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건1. 디지털 패러다임에 적합한 인권

1.1. 디지털 권리는 인권입니다. 법적 체제는 개인과 집단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디지털 복지와 쓰임새에 부합하도록 작동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공 영역에 속할 권리와 참여할 권리는 뺄레야 뺄 수 없고, 합의 된 대리권이 없으면, 사생활 보호권도 없습니다. 공용 데이터 자원을 통해 공동사회들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인식적 권리 없이는 지식에 대한 권리도 있을 수 없고, 알고리즘 투명성이 없으면 평등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유지하려면, 국가 및 비국가 개체의 역할과 책임이 뚜렷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¹ 주요 디지털 강국과 공식적으로 일치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독립적이고 자국의 이익과 열망에 부합하여 기술 및 혁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1.2.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공공재를 위한 국제 관리 체계 프레임워크는 테크노파시즘과 그것이 일으키는 냉각 효과에 반격하는 동시, ‘모두를 위한 소통의 권리’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1.3. 현재 협상 중인 “[다국적 기업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은 데이터 및 AI 혁신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를 일으킬 시의 기업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합니다.

안건 2.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공공재로서의 인터넷

2.1. 인터넷은 우리 모두가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면 모두가 끊임 없이, 유의미하게, 그리고 경제적, 보편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불리한 통합보다는 형평성과 복지를 추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2.2. 지배적인 소셜 미디어는 감시성 광고와 알고리즘적 이익 극대화에 기반을 두어, 인터넷의 우연성, 동질감, 해방적 잠재력을 무효화해 왔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인터넷의 정원에 길을 내어 포용적이고 다원적이며 탈중앙화되며 활기찬 범국가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건 3. 디지털 비동맹 원칙에 기반한 정당한 국제 경제 질서

3.1. 지속 가능한 평화는 새로운 AI 패러다임에서 제외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AI 군비 경쟁은 즉시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중사용 용 AI 기술과 관련 국제 무역은 사전에 국제 AI 과학 패널 (International Scientific Panel on AI)의 엄격하고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속적인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디지털 산업화는 한 가지 기술 진영에 갇히지 않은 고유한 경로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주권과 국지적 AI 역량은 재생 경제에 필수적이며, 전담 국제 공공 재정을 요구합니다

3.2. 제안 된 “국제 데이터의 10년” (2025-35)은 국제 데이터 연대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자원은 지배적인 디지털 기업이 갈취하도록 놔둘 수 없는 사회적 공공재입니다. 신뢰 받는 국제 디지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의 공정한 배당을 향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규제함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의 주인인 공동체에게는 어떤 데이터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어떤 목적으로 공유 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3.3. 국가 간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디지털 무역, 과세, 지적 재산권(IP) 체제는 급히 개혁해야 합니다.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 정부가 자국 경제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빼앗거나 데이터 및 AI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사회 복지 인프라에 대한 재정 기반을 해치는 새로운 가상 운영 방식 (예를 들어 잘못된 무역 청구, 남용적 이전 가격 조작, 국가 간 이윤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등)에서의 불법 금융 흐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세 체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IP 체제는 강력한 기업과 그 불투명한 AI 모델에 의해 대중의 지식과 문화 식민지화를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안전 4.미래 세대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이행

4.1. 생태계를 위한 정의는 디지털 개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디지털 정책과 규격은 그린워싱을 거부하고, 기업이 장악하는 디지털 가치 사슬의 생태적 해악과 불평등을 제거하되, 깨끗하고 건강하고 공평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에 따라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4.2. 국가 데이터 및 AI 정책과 로드맵을 추구할 때는 리우지구환경선언의 ‘예방 원칙’을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오르후스 협약에 명시된 환경 문제에 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정보 접근권과 결정에 동참할 수 있는 대중의 참여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4.3. 젊은이들의 인권과 열망은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출신의 젊은이들의 인권과 열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 내 및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물려받을 디지털 세계를 형성할 때 그들의 유의미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및 비국가 개체들은 “유엔 미래 세대에 관한 선언”을 지지해야 합니다.

WSIS+20 리뷰에서 즉각적인 조치 요구:

모든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국제적 협력과 협동을 기반으로 한 WSIS 행동 방침 하의 활성화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를 촉구합니다.

WSIS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행동 방침을 확장해야 합니다:

- 행동 방침 C1: 민주적 소유와 통제를 강조하는 디지털 공공재에 대한 공통 기준, 그리고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투명하고 책임이 있는 지배 구조.
- 행동 방침 C2: 유의미한 접속성을 위한 보편적인 접근권, 프라이빗 플랫폼 서비스라는 벽에 둘러싸인 정원의 해체, 시장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운용 가능한 플랫폼 구조, 네트워크 규격 세분화 대처, 그리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
- 행동 방침 C3: 미디어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보호하고, 민주적 건전성에 대한 위협, 특히 잘못된 정보, 혐오 발언, 젠더 기반 사이버 폭력 등 알고리즘이 악용될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 행동 방침 C4: 알고리즘화된 공공 생활 시대를 위한 비판적이고 혁신적인 공공 디지털 교육과 문해력, 그리고 디지털 사회와 경제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인간 개발을 위한 투자
- 행동 방침 C5: 사이버 기술과 AI의 군사화 및 무기화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 협정
- 행동 방침 C6: 인터넷 관련 공공 정책과 데이터 및 AI 지배 구조 사이의 연속성을 인식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

- 행동 방침 C7: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고 규칙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공유를 탐구하는 강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의제.
- 행동 방침 C8: 원주민 공동체의 지식 주권을 보호하고 전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개방형 과학 및 혁신 문화를 보장하는 생성적 AI 개발 지배 구조 프레임워크.
- 행동 방침 C9: 소셜 미디어와 몰입형 인터넷 환경에서 소통할 권리.
- 행동 방침 C10: 디지털 인권 벤치마크와 디지털 가치 사슬에서의 인권 및 환경에 관해 다국적 기업과 기타 사업 운영자들이 지켜야 할 실사 지침.
- 행동 방침 C11: 효과적인 데이터 및 AI 관련 국제 협력을 막는 장벽 제거 - 특히 AI 가치사슬 상 IP 체제의 유연성 부재, 제약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의 조항, 데이터 경제에서 억압 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산업 정책 선택지, 그리고 다수 세계에서의 컴퓨팅 능력 부족.
- 행동 계획에서 횡단적인 성별 통합을 위하는 디지털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행동 방침

